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일련번호 : US23-10
발간일 : 2023.3.15
보고자 : 워싱턴무역관 이준성

2024년 美 대통령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 바이든 대통령은 전년 대비 7.8% 증액된 6.9조 달러 예산안 제안
- ◆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가진 공화당 하원과의 논의 과정에서 난항 전망

I. 개요

- 백악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총 6.9조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대통령예산안(President's Budget)을 공개(3.9)
 - 올해 정부가 유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6.4조 달러에 비해 증액(+7.8%)
 - 예산안은 '24년 예상 부채를 1.8조 달러(美 GDP 6.8% 수준)로 전망하고, 증세 정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부채가 2.9조 달러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재량 지출(discretionary federal spending)은 약 1.7조 달러 규모
 - 이 중 국방 관련 예산은 8,864억 달러이며, 비국방 예산은 8,091억 달러
 - '24년 예산안 주요 현지 관심사는 (1) 대외: 우려국 관련 예산 동향, (2) 내부: 물가상승률·재정적자 관리 방안 및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공약

II. 예산안 주요 내용

- 주요 부처별 예산 동향
 - 전체 부처 중 국방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제안받았으며, 재무부는 부처별 예산 중 가장 높은 전년 대비 인상 폭(+15%)을 기록
 - * '23년 대통령예산안은 상무부(+31.2%)가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인상 폭 기록
 - (국방부) \$8,420억 요청, 전년 비 \$260억(+3.2%) 증액
 - * WSJ: 일부 전문가는 5% 수준인 인플레이션 고려 시, 실질적 감소로 지적
 - 핵무기 현대화 및 핵 억지 전략 강화(\$377억), 태평양 동맹 강화(\$91억), 우크라이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러시아 인근 국가 지원(\$60억)

- (재무부) \$163억 요청, 전년 비 \$18억(+15%) 증액
 - 국제청(IRS) 역량 강화(\$141억), 소외 계층 지원 강화(\$3.4억), 고용 확대(\$3.3억)
- (상무부) \$123억 요청, 전년 비 \$9억(+10.7%) 증액
 - 지역 기술혁신 허브 사업(\$40억), 차세대 기후 위성(\$21억), 통계국(\$16억), 국립 표준기술연구소(NIST; \$3.7억), 산업안보국(BIS; \$2.2억)
- (교통부) \$278억 요청, 전년 비 \$9억(+2.9%) 축소
 - 고속도로·대중교통 인프라 사업 일부 집행(총 \$761억), 철도 인프라 강화(\$15억)
- (에너지부) \$520억 요청, 전년 비 \$42억(+8.7%) 증액
 - 핵안보국 예산(\$238억), 기후 및 청정에너지 R&D(\$119억), 인력·인프라 투자(\$20억)
 - * 미국 내 우라늄 생산 및 농축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생산법(DPA) 적용 방안 포함

<바이든 대통령 '24년 부처별 제안 예산>

(단위 : 10억 달러/%)

연방정부 부처	'23년 의회 지출법안	'24년 대통령 제안 예산	증감률
국방부	816	842	3.2
보건복지부	130.4	144	11.4
보훈부	134.9	137.9	2.2
교육부	79.2	90	13.6
주택도시개발부	72.1	73.3	1.6
국무부	63.4	70.5	11.2
국토보안부	61.0	60.4	-1.0
에너지부	47.8	52	8.7
법무부	37.5	39.7	5.9
농림부	26.4	30.1	14.3
교통부	28.7	27.8	-2.9
내무부	17.2	18.8	9.3
재무부	14.2	16.3	15
노동부	13.6	15.1	10.9
상무부	11.2	12.3	10.7

[자료: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24]

□ 조세 정책 개편으로 향후 10년간 약 3조 달러 재정적자 감축 주장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조세 정책 개편**으로 \$4.95조, **지출 축소**로 \$5,740억을 절감할 방안 제시
 - 10년간 **사회복지제도 강화**를 위해 \$2.23조, **세금 감면 혜택**에 \$6,150억을 지출해도 **총 \$3.01조* 적자 감축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 예산안 제안 내에는 재정적자 축소 과정 중 발생할 \$3,300억 순이자 절감 효과도 포함
- **(중세)** 법인세율 인상, 고소득층 최소 소득세, 자본이득세 등 논의
 - 세수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28%(+7%)** 인상 및 장기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CGT) 세율 39.6%(+19.6%)** 인상 방안 제시
 - 미국 내 **상위 0.01% 자산보유자**에 최소 25% 세율 적용 주장
 -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 39.6%(+2.6%) 인상 및 사회복지장제도(Medicare) 세율 5%(+1.2%) 인상 제시

<조세 정책별 세입 효과>
(단위 : 10억 달러)

조세 정책	10년간 세입 효과
법인세율 21→28%로 인상	1,325.8
고소득층 사회복지장제도 세율 3.8→5%로 인상	650
국제 최저법인세율(15%) 도입	549
상위 0.01% 고소득층에 25% 최저세율 도입	436.6
기업 자사주 매입 환매에 대한 세율 인상	237.9
40만 달러(공동 45만) 이상 최고 소득세 37→39.6%로 인상	235.3
자본 소득 과세 변경	213.9
화석연료 세제 혜택 종료	30.8
이자의 경상소득 과세	6.5
디지털 자산 채굴에 에너지 소비세 부과	3.5

[자료: Bloomberg Government]

Ⅲ. 현지 반응 및 전망

- 재선에 도전할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의 리더십을 시험할 한해와 관련된 예산
 - **(WSJ)** '24년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첫 단계
 - '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주요 공약이 될 **사회보장제도 강화 및 재원 마련 방안**에 강점을 둔 예산안으로 평가
 - *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 발표 전, NYT 자필 기고문을 통해 사회복지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
 - **(NYT)** '24년 예산안은 행정부의 첫 상·하원 분할 의회 대형 과제
 - 행정부는 출범 이후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주요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과거 많은 행정부가 직면했던 **분할 의회에 따른 어려움을 직면**할 전망
 - 특히,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도입한 소득세 감면안**('27년 만료 예정)의 방향성을 두고 양당이 극명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
 - **(Politico)** 정부 보도자료 중 '미국 수호 및 세계적인 도전을 직면하기 위한 대통령 예산' 내 **인도-태평양 관련 항목**에 주목
 - * President Biden's Budget Keeps America Safe and Confronts Global Challenges
 - **인·태 지역 내 미국 영향력 강화**를 위해 총 \$83억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공급망 구축(\$20억), △인프라 구축(\$20억), △동맹 강화(\$23억)* 등 포함
 - * ASEAN 지원금(\$9,000만), IPEF 지원금(\$5,000만)
 - 예산 필요성을 "**대중경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out-compete China)**"으로 밝혀 최근 예산안 중 **대중경쟁 의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평가
 - **(CRFB)**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는 **예산안의 장기 전망 지표가 낙관적**이며, 보수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지적
 - 행정부는 '23-'24-'33년 실질 GDP 성장률을 0.4%, 2.1%, 2.2%로 전망하지만, 의회예산국(CBO)은 0.1%, 2.5%, 1.7%, 연준(Fed)은 0.5%, 1.6%, 1.8%로 예상

□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과 美 '24년 예산안을 논의할 전망

- '22년 의회 중간선거 승리 이후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며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가진 공화당은 정부 예산 축소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
 - 美 연방정부는 1월, 부채한도 상한(\$31.4조)에 도달한 이후 특별 조치를 시행하며 의회에 **6월 초까지 한도 인상을 촉구**했지만,
 -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의견이 관철된 '24년 예산안 집행 이전까지 채무 불이행 우려 해소 노력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행정부와 대립
 - 공화당의 자체적인 예산안은 미공개됐으나, 매카시 하원 의장은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안을 비판**

□ 향후 일정 전망

- **(Bloomberg)** 이전 예산안 논의 관행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 일정 발표
 - **(3~4월)** 예산 요청 관련 **의회 청문회**를 통해 부처 관계자 증언 취합
 - **(4.15일)** 최고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상·하원의 예산 결의안** 채택 마감일
 - **(5~9월)** 양원 **예산담당자(Appropriations)**의 지출 청구서 작성
 - * 양원 지도부는 이 과정에서 예산 결의안 없이도 최고 지출 한도 합의 가능
 - **(9.30일)** **예산안 논의 및 회계연도 마감일**; 예산 결의안 논의가 지속될 시 이전 회계연도 예산으로 정부 예산 임시 증당 가능

[자료원] 미국 백악관 보도자료, Bloomberg, CRFB, Politico, NYT, WSJ 및 KOTRA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 / 끝